



## 이재명 대통령(당대표 시절) 가덕도 피습사건, 공식 테러 지정

- 김민석 국무총리 제22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주재
- '16년 「테러방지법」 제정 후 정부차원의 첫 테러사건 지정 및 ▲'26년 국가대테러활동 추진계획 ▲'26-'27년 국가중요행사 지정 등 논의

□ 정부는 1월 20일(화) 오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\*를 개최했다.

\* 「테러방지법」 제5조에 의거 위원장(국무총리) 및 위원(대테러 관계기관의 장 20명)으로 구성

- 오늘 회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 가덕도 피습사건의 테러 지정여부와 함께 '26년 국내외 테러정세 전망을 반영한 「'26년 국가대테러활동 추진계획」을 심의·의결하였으며,
- 「테러정세 변화에 따른 '민·관 대테러업무 혁신 TF' 추진계획», 「'26-'27년 국가중요행사 지정», 「2026 밀라노-코르티나 동계올림픽 대테러 안전활동 기본계획」 등을 보고 받았다.

□ 김민석 국무총리는 먼저 「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」(약칭 「테러방지법」) 제정 및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, 지난 10년간 국민 안전을 위해 힘써온 대테러 관계기관의 노고를 격려하는 한편,

- 가덕도 피습사건이 “K-민주주의의 나라, 대한민국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”이었음을 언급하며, “앞으로 정부는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K-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각종 테러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대테러체계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보완해나갈 것”임을 강조하였다.

□ 오늘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## ① 2026년 국가대테러활동 추진계획 (심의·의결)

- 정부는 대테러 관계기관의 지난해 대테러활동의 성과를 점검하고, 올 한 해의 대테러활동 추진계획을 마련하였다.
- ▲테러대응체계 및 업무전반에 대한 혁신을 추진하고, ▲각급 테러대책협의회 등 유관기관 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하며, ▲대드론시스템 구축 및 보완, ▲「밀라노 동계올림픽」등 국내외 주요 국가중요행사 대테러 안전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.

## ② 주요인사 관련 사건 테러지정 여부 검토 (심의·의결)

- 국무총리는 ‘이재명 대통령 민주당 대표시절 가덕도 피습사건(’24.1.2)’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관계기관\*이 참여하는 대테러합동조사팀 재가동을 요청하였고,

\* 국가정보원·경찰청·소방청·군(방첩사령부)·국립과학수사연구원

- 합동조사 결과, 범인의 행위는 ‘테러방지법 상 테러’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나, 이를 테러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 의견 및 법리적 해석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.
  - 또한, 법제처 법률검토를 통해 사건이 ‘테러방지법 상 테러’에 해당하고, 테러지정에 대한 명시적 절차규정이 없더라도 ‘테러인지 여부’에 대하여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서 심의·의결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.
  - 정부는 위 내용들을 토대로 금일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서 동 사건의 테러지정 여부를 심의한 결과, 이 사건의 테러 지정\*을 의결하였다.
- \* 「테러방지법」 제정(’16년) 이후 정부차원의 최초 테러 지정
-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추가적으로 실시하고, 선거기간 주요인사에 대한 신변보호 강화 등 유사 사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, 「테러방지법」을 비롯한 법·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기로 하였다.

### ③ 테러정세 변화에 따른 「민·관 대테러업무 혁신 TF」 추진계획 (보고)

- 「테러방지법」 제정('16년) 10주년과 최근 급변하는 국내외 테러정세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「민·관 대테러업무 혁신 TF」를 구성하여 업무 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다.
- TF는 민간전문가와 대테러센터장을 공동위원장으로, ① 법령·규정, ② 대테러 전문성, ③ 조직·예산 등 3개 분과로 운영된다.

### ④ 2026-2027년 국가중요행사 지정 (보고)

- 2026년 국가 중요행사는 테러대책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10건으로 확정되었고, 관계기관과 공조하여 이에 대한 대테러 안전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.

| 연번 | 행사명                    | 주관기관  | 개최지역             | 개최기간        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1  |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대회  | 문체부   | 이탈리아<br>밀라노 코르티나 | 2.06~22        |
| 2  | 2026 FIFA북중미월드컵        | 문체부   | 캐나다<br>미국        | 6.11~7.19      |
| 3  |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          | 국가유산청 | 부산               | 7.12~29        |
| 4  | 2026대구세계마스터즈 육상경기대회    | 문체부   | 대구               | 8.22~9.3       |
| 5  | 2026 여수세계 섬박람회         | 전남    | 여수               | 9.05~11.04     |
| 6  | 2026 아이치 나고야 하계아시아경기대회 | 문체부   | 일본<br>아이치        | 9.19~10.04     |
| 7  | 서울안보대화                 | 국방부   | 서울               | 9月中<br>(3일간)   |
| 8  | 한·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        | 국방부   | 서울               | 9月中            |
| 9  | 제31회 부산국제영화제           | 부산시   | 부산               | 10月中<br>(10일간) |
| 10 | 국제원자력기구 원자력장관회의        | 과기부   | 인천               | 10.27~29       |

- 특히, 2026년 국가 중요행사로 지정된 해외 경기대회 3건에 대한 대테러 안전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주관부서인 외교부, 문체부 등과 협의하여 추진할 예정이다.

## 5 2026 밀라노-코르티나 동계올림픽 대테러·안전활동 추진 (보고)

- 하계올림픽 대비 위협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으나, 대회 임박에 따른 국제적 관심 증폭으로 인해 ‘자생적 테러\*(Lone Wolf)’ 및 불특정 다수를 노린 소프트 타겟 공격 위협이 증가에 대비하여,

\* 전문 테러 단체 조직원이 아닌 개인이 배후 세력 없이 스스로 행동에 나서는 테러

- 외교부·문체부 등 기관별 전담조직\*을 편성·운영하는 등 우리 선수단과 국민 보호를 위한 동계올림픽 대테러·안전활동 방안을 논의하였다.

\* 외교부(신속대응반 및 임시영사사무소), 문체부(현지 종합상황실 및 국내 상황반) 등

|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담당 부서 | 국무조정실<br>대테러센터 | 담당자 | 사무관 | 이성호 (02-2100-2034) |
|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| 중 령 | 김성수 (02-2100-2024) |
|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| 사무관 | 강지현 (02-2100-2043) |

